

사례발표

주제 : 재원확충 및 경비절감 등 효율적 재정 운영사례

4개 지방자치단체 대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기 양주시, 전남 여주시)

재정운영 우수사례

대전광역시

목 차

- I. 대전광역시 현황
 - 1. 우리시 소개
 - 2. 재 정 여 건
- II. 재정운영 우수사례
 - 1.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 2. 수지균형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 3.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 4.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 5. 중앙지원예산 지속적 증가
 - 6. 통합기금 효율적 운영
- III.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성공사례
 - 1. 사 업 개 요
 - 2. 추 진 배 경
 - 3. 사 업 목 적
 - 4. 추 진 내 용
 - 5. 기 대 효 과
- IV. 맺 음 말

I. 대전광역시 현황

1. 우리시 소개

- 우리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 대전을 경유 해야만 서울, 부산, 광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어느지역 출신이든 비교적 편견없이 살아가는 포용의 도시임.

- 최근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후보지중 어느곳이 선정되어도 대전은 배후 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이며,
- 또한 고속전철(KTX)이 금년 4월에 개통되어 서울과는 불과 40분대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음.
- 우리시 면적은 540km²이며, 인구는 2003년말 기준 1,438천명으로 우리나라 7대 도시중 면적, 인구면에서 5번째 도시이며
- 예산규모는 1조 9,02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2.2%로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 순위에 해당됨.

2. 재정여건

- 우리시 재정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과세 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를 보아도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 또한 향후 재원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동서관통도로건설, 대단위 SOC사업 등 수요가 크게 증가 될 전망이고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욕구 증대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

II. 재정운영 우수사례

1.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매년 예산편성전에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단위사업별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대학교수·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 다양하고 발전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투명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2. 수지균형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 지방채는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01년 말 7,962억원에 달하던 지방채 규모를 2003년 말 7,577억원으로 385억원을 축소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총지방채 규모를 7,160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 또한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금년 당초예산 기준 347억원을 적립,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미리 확보하였음.

3.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02년도에는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03년도에는 일반운영비 5%, 업무추진비 10%를 절감 편성하는 등 총 26억원의 경비를 절감 당면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 경상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세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재원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국가시책에 부응하면서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인 재정운영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

4.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투자심사를 병행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2003년 예산의 경우 사업비 대비 93.8%를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운영하였고
- 투자심사 결과 22건 가운데 20건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음.
- 세입 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세입을 정확히 파악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세입 결산액 19,126억원, 세입 예산액 18,570억원으로 반영 비율이 99.3%의 성과를 거두었음.

5. 중앙지원예산 지속적 증가

- 우리시 재정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비확대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국비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국비지원확보 특별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사업 신청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우선순위등 심층 분석하고 사전에 중앙관계관과 협의 검토하는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중앙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6.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

-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총 27개 기금을 2000년부터 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예산총괄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여 금융사고 방지와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금융자산 전문가에 의한 고금리 운용으로 현재까지 26억원의 추가이자 수입을 올려 저금리 시대에도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Ⅲ.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성공사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외자유치사업
- 위 치 : 대덕구 현도교 ~ 서구 가수원교
- 규 모 : 길이=28km, 넓이= 4~6차로
- 사 업 비 : 5,844억원

공 구	구 간	규 모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L=28km, B=20~28.5m	5,844	
1공구	현 도 IC~신구교	L= 4.5km, B= 20m	324	3단계
2공구	신구교~와동 IC	L= 3.3km, B= 20m	685	“
3공구	와동 IC~원촌교	L= 5.0km, B= 28.5m	630	‘93년 완공
4공구	원촌교~엑스포다리 ~한밭대교	L= 4.9km, B= 28.5m	2,196	1단계(시공중)
5공구	둔산대교~만년교	L= 5.0km, B= 28.5m	780	‘93년 완공
6공구	만년교~가수원교	L= 5.1km, B= 28m	1,229	2단계

2. 추진배경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외자유치사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심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여 연결하는 우리시 최초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으로
- 최초 '8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대전엑스포 개최시인 '93년에 전체 6개공구 중 2개공구를 완공시켰으며, 그후 나머지 공구를 완공하고자 '95년부터 시 재정사업으로 1단계를 착공 하였으나 '97년말 IMF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 재정력이 악화되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음
-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본 도로의 완공이 시급하여 공사중단후 처음에는 외국차관으로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IMF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신용의 급격한 하락으로 외화차입도 어렵게 되었으며
- 외화차입이 성공을 한다하여도 당시 IMF사태로 인한 가파른 환율변동으로 환차위험이 너무 커 외화차입을 포기하고 외자 등 민자에 의한 사업자 직접투자 방식을 강구하게 되었음.
- 국내기업들은 당시 IMF로 신용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BIS)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자사업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여 외국 투자사와 무수한 접촉 끝에 현재의 투자자인 프랑스 이지스사와 '98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3. 사업목적

- 갑천수계를 이용한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은 도시생활의 경제성 및 편리성을 높여 대전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한 대화동 제1·2산업단지 및 신대동 제 3·4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교통로 제공으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시간절약을 가능케 하여 기업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하며

-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70여개 민·관 전문연구기관에 원활한 접근로를 제공하여 연구단지의 연구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활성화시켜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또한, 둔산신도심과 부도심인 진잠·가수원지역과 유성지역 그리고 신탄진지역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 각 중심간의 기능보완 및 연계 구축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 현재 개발중에 있는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토지개발자원인 약 770만평 규모의 서남부생활권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어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남부권 신도시 건설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추진내용

가. 투자회사 현황

- Egis Projects S.A
 - － 프랑스계 유료도로 건설운영전문 다국적 기업
 - － 현재 10여개국 7,000km 유료도로 운영
 -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사업의 주간사
- Singapore Piling and Civil Engineering Pte. Ltd.
 - － 싱가포르의 투자전문 회사로 Hwa Hong Corporation의 자회사
- 두산건설(주) : 국내파트너
- 투자3사 지분구조 : 3사 1/3씩 균등 지분

나.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사업 : 4공구 (원촌교~둔산대교, ~한밭대교)
 - －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중 (IMF로 중단된 공구)
 - － 2001년 12월 착공 / 2004. 7. 1 준공

- 2단계사업 : 6공구(만년교~가수원교)
 - 2004년 사업착수 예정/ 2006년 완공목표 사업추진
- 3단계사업 : 1·2공구(신탄진 현도교~와동IC)
 - 2단계사업 착공후 3단계사업 협의예정/ 2007년 완공목표

다. 사업비 조달

- 자본현황

(단위 : 억원)

총 사업비	자기자본	타 인 자 본		시 비
		엔 화	원 화	
2,196	65(500만불)	1,384(130억엔)	226	521

- 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계	개발및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운 영 설비비	초 기 운영비	예비비 및기타
2,196	125	1,494	299	87	106	85

5. 기대효과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계기
 - 본 사업의 성공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환경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SOC사업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시킴으로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어 국가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 5,000억원 규모의 단기 집중투자로 침체된 대전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

- 용창출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
 - 인근 제1·2, 제3·4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에 원활한 수송로 제공으로 물류비를 절감시켜 기업경쟁력 향상기여
- 시 재정적 측면
 -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성공으로 시재정 운영에 여유 확보
 - ※ 매년 200억원씩 투자하여도 20년이상 소요될 사업
 - 사업비의 이용자 부담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의 합리적 재정운영
 - 당면한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추진방식(Project Finance) 도입으로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현안사업 해결
- 시 교통난의 획기적 개선
 - 대전의 남북을 잇는 새로운 교통축 형성
 - 기존 도심교통의 분산효과로 도심의 교통난 완화
 - 서남부생활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흡수로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
 - 대전과 청주공항간 고속화도로 확보로 정부대전청사와 계룡대,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하는 국제도시로의 발전기여
-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 세계적인 고속도로건설 및 운영관리회사의 참여로 선진 건설기술과 경영기법, 교통관리기법 전수기회 마련
- 사회적 측면
 -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자 구제로 실업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기여

IV. 맺 음 말

-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기반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체계하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대단히 어려운 반면 시민의 욕구분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 이처럼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시민의 여망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경
상예산 절감과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부족재원의 한계를 극복, 지방재정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
- 또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내에서 차입하여 안정적 재정운영
을 하고 있으며, 투융자 심사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계획재정
을 실현해 가고 있음.
- 아울러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
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사업 억제와 경상예산 긴축운영으로 세입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축소, 감채기금을 지속 적립하여 수
지균형의 건전재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음.
-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우리시의 최우선 사업으로 IMF경제지원
체제 이후 재정형편이 어려워져 사업의 중단위기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
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 재정운영에 숨통을 트여
주었음.
-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시내 고속화도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
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은 그동안 제조업 및 부동산에 편중되었던 외
국인 투자가 다양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었음.
-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 모든 행정
이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투명행정, 기업이 정신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경영
행정 등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 수행에 시정방향을 두고,
-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성과 안정성, 생산성 확보, 경상경비
절감 등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

財源擴充 및 經費節減 등 效率的 財政運營事例

경 상 북 도

목 차

- I. 머리말
- II. 原子力發電에 대한 地域開發稅 導入
 - 1. 事業推進 背景
 - 2. 原子力發電에 대한 課稅의 必要性
 - 3. 原子力發電에 대한 課稅方案
 - 4. 期待效果
- III. 廣域上水道(安東~義城) 用水供給事業
 - 1. 推進背景
 - 2. 事業推進內容
 - 3. 期待效果
- IV. 맺는말

I. 머리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정부보조에만 의존하게 되어 결국은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의 재정규모는 총 8조 291억원(일반 6조 6,467억원, 특별 1조 3,824억

원)으로 도가 2조 8,621억원 시군이 5조 1,670억원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면에서 도는 27.2%로 전국 도 평균 41.3%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며, 시와 군 모두 전국평균을 밑도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단체가 23개 시군중 10개 시군이나 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일부 부서 및 사업에 대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운용을 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도가 추진하고있는 신세원 발굴과 경비절감 대책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原子力發電에 대한 地域開發稅 導入

1. 事業推進 背景

원자력발전은 전원(電源) 중 가장 경제적인 최선의 에너지원이나 원자력발전의 기여도 이면에는 핵이 가지는 엄청난 파괴성과 사고사례 등에 비추어 방사능 피폭위험, 제한구역 설정, 한쪽어류 고갈, 발전진동 소음 감내 등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2004년 6월현재 월성원전 4기, 울진원전 4기, 고리원전 4기, 영광원전 6기 등 총18기가 설치되어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추가로 2기가 건설 중이고, 16기가 계획 중에 있으며, 원자력 발전량이 1,191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38.9%를 차지하여 세계 6대 원전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연평균 10%대의 전력소비증가율을 감안할 때 적은 량의 우라늄으로도 발전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산업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의 예에서 보듯이 방사능 피폭위험, 지질적인 문제, 제한구역설정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장애, 온배수 배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 또한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활발한 지역개발과 함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주민복리증진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이미 시행하고있는 수력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추진기로 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시·도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40여 차례 회의 및 중앙정부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2. 原子力發電에 대한 課稅의 必要性

1) 조세이론상 타당성

수력발전용수의 경우 1992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하여 2002년에는 83억원이 부과되고 있는 바, 과세대상간 및 납세의무자간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전시설은 주변지역을 방사능 피폭위험에 노출시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험시설이지만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수익사업으로서 원인자부담 내지 수익자부담적인 성격이므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을 가진다.

2) 지역실정상 필요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재장비 확보, 대피소·의료시설 설치 등 충분한 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원전소재 자치단체 재정상태(2004년 기준)를 보면 전국 평균자립도가 57.2%임에도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경북(27.2%), 전남(14.2%) 등 모두 전국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이들 자치단체에게 방재대책과 지역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미흡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선흐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협조가 필수적으

로 요구되므로 원전의 발전수익금 일부를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로 납부토록 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과세 사례

가. 일본의 경우

원자력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는 국세로서 전원개발촉진세, 지방세로서의 핵연료세, 핵연료물질등취급세가 있으며 전원개발촉진세는 국세로 징수를 하지만 원전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되어진다.

<일본의 원전에 대한 조세부과 내용>

세 목 별	과세대상	세 율	도입단체	비고
핵 연 료 세	핵연료가액	100분의 7	북정현 외 10	
핵연료물질등취급세	폐기물 등	100분의 7 외	청삼·차성현	
전원개발촉진세	판매전력량	kw당 4.72원	국 세	

나. 미국(워싱턴주)의 경우

공익사업구(Public utility district) 내에 있는 발전시설의 영업면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액은 전기의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총 수입, 고객이나 다른 공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전기량(kwh),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포함)에서 생산한 전기의 판매가격이 된다. 세율은 전기판매가격의 1.5%를 기본세율로 하고 부가세율로서 기본세율에 7%를 더하고 있다. 또한 주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들도 제한세율을 6%로 하여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적인 면이 있다.

다. 프랑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뫼뮈느(Commune)에서 전기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전기소비량으로, 세율은 8% 미만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디파르트먼트(Departement)에서도 전기공급세를 도입하여 콤뮌느(Commune)의 전기세에 부가하여 4% 미만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3. 原子力發電에 對한 課稅方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는 핵연료 또는 핵폐기물이나 발전된 전력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핵연료 또는 핵폐기물에 대한 과세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방사능 피폭위험, 개발제한 등의 여건과 일본의 경우 핵연료세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7인 점을 고려하여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중간저장물인 핵폐기물 1kg당 70,000원으로, 영구처분용 핵폐기물은 1m³당 300,000원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각각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시 비핵전문가인 세무공무원이 핵연료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과세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2) 발전량에 대한 과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근거는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핵연료의 사용량을 통하여 생산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핵연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수력발전용수에 대해 부과된 지역개발세가 2003년의 경우 전국 평균 2원 정도인 점을 감안¹⁾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은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율 보다는 다소 높은 세율(1kw당 2~3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1)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탄력세율(50%)을 적용하여 기본세율(발전용수 10m³당 2원)보다 높은 발전용수 10m³당 3원을 과세하고 있다. 이를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1kw당 3.83원 정도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전원개발촉진세율을 1kw당 4.72원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인 전원개발촉진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에서 다시 법정외 보통세로 이중과세성격의 핵연료세와 핵연료물질등취급세를 각각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미국(워싱턴주)의 경우 기본세율 1.4%와 부가세 7%, 기초자치단체의 6%의 제한세율 등 이중과세를 하고있다는 점, 프랑스의 전기세율이 8%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kw당 4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과세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가. 전력사용요금 인상의 문제

지역개발세 부과로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될 우려가 있으나,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산정시 과세표준에서 손비로 인정되어 실제로 전기판매단가의 3.6%인 2.68원 정도의 부담에 지나지 않고, 또한 2003년도에 한전이 2조 3,159억원, 한수원이 6,73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양호하므로 전력요금의 인상이 없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나. 지방교부세 감소의 문제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우려되나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불산입하여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시 이를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4. 期待效果

1) 세수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직접적인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세수증대를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2002년 발전량 1,191억kwh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kwh당 4원의 세

율을 적용 산출할 경우 총 세액은 4,764억원에 이르고, 8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경상북도의 경우 2002년 일반 도세(지방교육세 제외분) 4,000억원의 51.8%에 해당되는 2,072억원의 지방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핵연료보다는 발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량에 과세시 연간 예상세수 규모 (2002기준)>

구 분	합 계	경 북			부산 (고리)	전남 (영광)
		소 계	월 성	울 진		
발전량(억kwh)	1,191	518	232	286	266	407
추정세액(억원)	4,764	2,072	928	1,144	1,064	1,628

2) 지역개발촉진 및 안전체제유지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로 원전소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다.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응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체계를 갖춘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용지출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방사능피폭에 대비한 안전체제 유지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전원입지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Ⅲ. 廣域上水道(安東~義城) 用水供給事業 推進

1. 推進背景

경상북도 상수도 보급률은 74.6%(총인구 2,742천명, 급수인구 2,046천명)이며 정수장 시설은 107개소에 1,297천톤/일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나 실제 급수량은 781톤/일 규모로 가동율이 60%정도로 낮은 실정이며, 10천톤/일 이상 규모

의 시설은 24개 정수장으로 나머지 83개정수장은 10천톤/일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로 이들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관리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여 수돗물생산 원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군별로 운영하는 소규모 정수장을 통·폐합하여 대급수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 상수도 시설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정수장수 (개소)	시설용량 (천톤/일)	급수량 (천톤/일)	비 고
경상북도	2,742	2,046	74.6	107	1,297	781	
안 동 시	176	135	76.4	5	79	38	
의 성 군	69	32	46.3	7	15	10	

특히 안동시는 안동댐과 임하댐등 2개의 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동시의 정수장은 5개소 79천톤/일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나, 대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급수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실제 급수량은 38천톤/일 규모로 가동율이 48%에 지나지 않아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695.7원으로 타지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평균의 85%인 955mm 정도의 수준으로 그 중에서 70%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내려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량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에는 2개월 동안 시간제 급수를 하였으며, 2000년에는 4개월 동안 시간제 및 격일제 급수를 하였고 2001년에는 3개월 동안 시간제 및 격일제로 급수하는 등 물부족 상태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수질에 있어서도 분석결과 경도가 높아 머리를 감기 힘들 정도며 보일러 배관에 스케일이 많이 쌓여 배관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등 상수도 수원으로서도 부적합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안동시 남후, 일직, 남선면 일원 1,710세대 4,960명과 의성군 의성읍 외 5개면 12,000세대 35,400명의 지역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하고, 안동시 상수도 생산시설의 정비 및 가동을 증가로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며, 또한 인근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주민화합과 협력체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가능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1년 12월 7일 안동시와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간 광역상수도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결의를 한 바 있다. 그 후 양 자치단체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의하여 총사업비 140억원중 5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 事業推進内容

의성군지역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사곡, 봉양 등 6개 읍면 12,000세대 35,400명과 안동지역 남선, 남후, 일직면 등 3개면 1,710세대 4,960명 등 총 40,360명에 대한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오는 2007년까지 기존의 용상정수장 시설을 1일 생산능력 72천톤으로 보강하며 송·배수관을 95km 매설, 가압장 및 배수지 1석을 시설키로 하고 2004년 5월 6일 안동시와 의성군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정수공급 기준량 1일 15천톤을 의성군의 6개 읍면에 10년간 공급키로 하되 양 자치단체간 협의하에 공급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설에 따른 비용분담은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각 행정구역내 발생 비용을 자치단체별로 분담하여, 각각 분리 발주한 후 동시 준공키로 하였다.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되, 매년 결산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다음연도의 징수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3. 期待效果

1) 지방상수도 보급확대 및 맑은 물 공급

안동시와 의성군의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으로 안동시에서는 남후면, 일직면, 남선면 일원 1,710세대 4,960명에 대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대하게 되며, 의성군에서는 6개 읍면(의성읍, 단촌, 점곡, 사곡, 옥산, 봉양면)에 대한 식수난을 해소하고 오염되지 않은 반변천의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므로 원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여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주민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광역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예산절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동시에서는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인한 생산비용을 987백만원 절감하게 되어 상수도요금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안동시 용상 1정수장 및 일직정수장을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연간 720백만원 정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성군의 경우 4개정수장을 폐쇄하게됨에 따라 상수도 원가절감 및 유지관리비를 연간 1,684백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V. 맺는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수력발전의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에 비추어 과세대상 및 납세자간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원자력 시설은 위험시설이지만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수익사업이므로 원인자부담 내지 수익자부담 원칙 등 제반 조세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흡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과 열악한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 지역실정면에서도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 있다.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kwh당 4원으로 할 경우 4,764억원에 이르는 세입 증대의 효과가 있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낙후된 지역개발의 촉진,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실질적 방재대책 수립, 또한 원전시설 입지확보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등 간접효과도 기대되므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되는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사업은 안동시의 경우 정수장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원가절감이 가능하며, 의성군은 양질의 수원을 항상 공급받음으로써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두 자치단체는 상수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절감의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상수도사업의 상호 보완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도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공급사례를 참고하여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

양주시 지방재정분석·진단과 재정확충방안

경기 양주시

목 차

I. 序 論

II. 本 論

1. 양주시의 일반 현황과 지방재정현황
2. 재정진단 및 재정운영의 사례
3. 앞으로의 방향(재정확충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III. 結 論

I. 序 論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 환경, 지역의 개발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민선단체장들의 주민욕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자체수입의 경우 세원의 경직성으로 크게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선이후 각 지자체마다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결국 쓰기는 쉬우나 벌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각급 자치단체들은 행정을 경영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과 외침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이자치행정의 제1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21세기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둘러싼 환경조건은 급격하고 커다란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 다양하고 근본적인 차원의 구조

변화를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환경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영방향도 개선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오늘날 지방자치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하면 폭발적으로 증가와 함께 급변하는 주민들의 수요와 선호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러한 자치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력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자기 지역의 여건에 가장 잘 맞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해 내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양주시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25.4%인 78.97km²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51.4%인 159.42km²로 지역개발의 어려움점 등 경기북부지역 가운데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방재정진단 분석 결과 우수하게 나타난 2001년도를 주요기준으로 양주시의 지방재정실태를 분석·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재정 일반 및 세수 확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양주시의 재정책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양주시의 일반 현황과 지방재정현황

■ 양주시의 일반현황

1) 양주시의 연혁

양주지역에 최초의 국가가 형성된 것은 삼한시대 마한의 모수국이었으며 “양주”라는 지명은 후삼국시대에 최초로 나타난다. 이때의 양주는 지금의 서울로 추정되며 오늘날의 양주는 조선왕조 개국후, 1395년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한양주민을 그 당시 전주로 옮기고 전주를 양주군으로 개칭하여 현재의 위치와 지명이 일치하게 된다.

양주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군사적으로 충돌이 잦았던 곳으로 고려 말에는 회암사를 중심으로 조선왕조를 개창하는데 산실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양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2003년 10월 19일자로 ‘군’에서 ‘시’로 승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양주시의 지리적 특성

양주시는 경기도 동북내륙권에 위치하며 동은 포천, 남은 의정부, 북은 동두천과 연천군, 서는 고양, 파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속한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에서 28km, 수원에서 64km, 인천에서 9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부는 장흥면의 만장봉(740m), 도봉산(716m)을 중심으로 산간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부는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고 동측은 천보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도락산(441m)과 불곡산(361m)을 중심으로 환형의 대규모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양주는 경기북부지역의 분수령으로 주요하천의 발원지이며 주요수계는 중심하천인 신천과 서쪽의 곡릉천, 남측의 중랑천 수계로 분리할 수 있다. 신천은 동두천시를 통해 임진강으로 유입되며 중랑천은 의정부시와 서울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가며 곡릉천은 고양시를 통해 한강하류로 유입된다.

■ 양주시의 인구현황

양주시는 1읍 4면 6개동으로 면적은 310.18km²이며 인구는 2004년 5월말기준 150,866명으로 ‘2001년부터 3년간 평균 9.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km²당 486명이다. 읍면동별로는 회천2동이 전체인구의 16.8%인 25,348명으로 가장 많고 남면이 8,218명으로 가장 적다. 연령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비생산 연령층 인구(0~14세) 34,397명(22.8%), 생산활동인구 100,628명(66.7%), 노령인구 15,841명(10.5%) 이다. 외국인의 경우 총 3,112명이 거주하고 있다.

■ 양주시의 지방재정 현황

양주시의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추이를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1>, <표2>과 같다.

<표 1> 일반회계 예산규모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 년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46,920,753	118,507,738	118,118,834	155,886,573	197,220,000
지 방 세	22,484,000	24,352,053	27,406,444	31,209,000	34,791,870
세외수입	28,659,626	17,307,078	16,116,939	27,817,194	39,642,152
지방교부세	12,170,000	17,930,000	26,875,800	32,530,000	40,941,700
지방양여금	3,658,763	5,474,574	6,864,406	10,921,976	10,427,459
재정보전금	-	6,647,289	10,520,816	17,356,738	20,628,103
보 조 금	74,948,364	45,596,744	30,334,429	36,051,665	50,788,716
지 방 채	5,000,000	200,000	-	-	-

<참고 : 2003 경기도 예산개요>

<표 2> 일반회계 예산규모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 년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46,920,753	118,507,738	118,118,834	155,886,573	197,220,000
경상예산	26,271,665	26,637,668	29,263,179	32,272,617	37,906,807
사업예산	114,332,087	85,258,734	72,407,940	103,091,515	129,820,852
채무상환	588,700	880,050	1,343,235	1,292,760	1,112,350
예비비등	5,728,286	5,731,286	15,104,480	19,229,681	28,379,991

<참고 : 2003 경기도 예산개요>

특히, 2003년도의 예산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총예산액은 309,026백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197,220백만원, 특별회계는 111,806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2%이다.

지방재정의 현황에 있어 2001년 기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시·군별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요구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경기북부 10개시군의 경우에는 1999년, 2000년에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그리고 2001년에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들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7.6%)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기남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평균에 있어서 1999년 52.6 : 66.3, 2000년 51.9 : 66.6, 2001년 54.1 : 66.8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에는 1999년 42.3%, 2000년 48.6%, 2001년에는 54.2%로 남부 평균인 66.3%, 66.6%, 66.8%는 물론이고 북부평균인 52.6%, 51.9%, 54.1%에도 2001년을 제외하고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3>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시군명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합 계	6,783,176	7,161,139	7,428,300	8,897,442	8,922,791
북부시군	2,324,870	2,118,220	1,955,890	2,347,496	2,430,527
고 양 시	549,295	599,092	462,962	587,190	592,982
의정부시	196,259	172,716	213,070	260,440	279,271
파 주 시	309,362	242,684	223,266	267,977	287,262
남양주시	368,800	356,458	285,047	303,665	270,770
구 리 시	110,891	130,180	137,876	158,726	162,493
포 천 시	154,273	152,791	185,428	227,690	210,936
양 주 시	146,921	118,508	118,119	155,888	163,518
동두천시	171,674	122,916	92,786	113,122	131,468
가 평 군	134,125	115,691	111,539	140,703	152,536
연 천 군	183,270	107,184	125,797	132,095	179,291
남부시군	4,458,306	5,042,919	5,472,410	6,549,946	6,492,264
수 원 시	554,293	644,870	594,217	724,915	686,759
성 남 시	502,559	539,374	630,483	620,943	723,787
부 천 시	357,520	480,420	415,156	527,131	473,816
안 양 시	370,055	300,430	298,454	388,187	379,545
안 산 시	301,369	320,733	359,886	483,464	459,982
용 인 시	260,236	377,139	397,214	597,534	691,457
평 택 시	230,800	263,100	321,559	405,093	377,751
광 명 시	150,927	160,308	214,056	214,050	218,940
시 흥 시	157,000	191,794	170,066	242,925	270,717
군 포 시	120,505	123,842	136,993	161,972	160,290
화 성 시	196,793	202,745	284,040	288,513	318,452
이 천 시	173,427	188,948	177,315	240,568	199,620
김 포 시	151,845	141,179	160,975	193,997	192,267
광 주 시	104,696	165,734	133,179	193,248	197,955
안 성 시	181,815	233,182	200,453	244,832	223,874
하 남 시	98,059	101,072	106,266	151,724	147,184
의 왕 시	76,558	75,201	88,848	112,306	117,653
오 산 시	80,967	104,619	284,040	112,048	122,800
여 주 군	127,754	162,806	179,550	213,808	177,630
양 평 군	140,493	129,542	174,358	219,370	175,604
과 천 시	120,635	135,881	145,302	213,318	176,185

<자료 : 2003 경기도 예산개요>

<표 4>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의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구 분	북부평균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1999	52.6	83.5	70.1	49.7	60.2	67.0	50.0	42.3	46.5	33.8	22.5
2000	51.9	81.6	65.8	51.0	62.4	61.3	43.6	48.6	46.5	26.7	31.0
2001	54.1	87.8	72.7	53.2	63.8	56.0	46.3	54.2	49.2	32.8	25.1
2002	52.4	90.0	65.4	52.5	65.9	59.9	42.2	47.3	40.8	29.2	30.4
2003	48.7	84.8	63.1	53.1	55.0	65.9	37.5	49.4	29.7	26.2	22.7
구 분	남부평균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1999	66.3	88.7	88.3	82.6	91.3	86.6	87.3	53.2	63.4	75.6	84.7
2000	66.6	89.0	83.9	78.3	87.1	85.3	83.8	56.6	68.8	79.0	77.5
2001	66.8	86.0	89.7	80.6	86.4	81.6	88.7	58.6	72.1	72.6	77.7
2002	65.5	86.3	88.7	84.7	83.0	76.9	79.1	53.3	67.6	66.3	74.2
2003	61.6	74.4	84.8	81.4	83.5	73.4	79.0	47.7	66.3	59.4	71.2
구 분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1999	59.2	49.8	61.6	57.2	35.4	66.9	56.8	46.1	33.5	27.4	97.1
2000	63.7	54.9	65.2	64.7	33.1	57.0	59.9	49.3	35.6	31.0	95.2
2001	69.8	55.8	64.2	65.6	36.2	49.0	62.1	45.1	33.8	31.4	96.3
2002	64.2	59.7	55.6	69.3	39.8	53.5	60.0	53.9	41.5	23.5	94.8
2003	63.8	53.0	52.5	58.4	36.2	46.4	55.3	50.1	36.1	25.4	95.8

<주: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1999년: 59.6%,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6%, 2003년: 56.2%이다>

※ 자료: 2003 경기도 예산개요.

2. 재정진단 및 재정운영의 사례

행정자치부가 매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건전성·효율성 2개 부문과, 자주성·안정성·생산성·노력성 4개 영역 및 10개 지표에서 나타난 경기북부권 군지역합계와 우리 양주시의 분석결과이다.

<표 4> 양주시 재정분석 지표값

(단위: %)

부 문	영 역	지 표	지 표 값		비 고
			경기북부 군 계	양 주 시	
건 전 성	자주성	재정자립도	29.77	39.60	
		재정력 지수	38.20	56.84	
	안전성	경상수지비율	36.13	37.30	
		세입세출충당비율	92.79	94.10	
		지방채상환비율	4.49	4.29	
효 율 성	생산성	재정계획운영비율	111.77	101.05	
		세입예산반영비율	100.34	98.51	
		투자비 비율	74.68	75.21	
	노력성	자체수입증감율	118.62	135.65	
		경상적경비증감율	107.89	105.90	

참고 : 200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행정자치부)

1) 양주시 재정분석 지표값 및 그 내용

양주시의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각 부문별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북부권내 재정지표를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투자비비율, 경상적경비증감율 등의 대부분의 지표값에서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영세공장의 내재, 지역적인 특화사업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앞으로 재정책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2) 양주시 건전재정 운용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 즉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도 어렵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우리시의 순수 자체재원확보율은 평균 15%안팎으로 경기북부시군중에서도 재정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의 극복을 위해 양주시에서 재정운영상 나타나는 불건정성·비효율성의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사례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문

먼저, 담배 배정량에 대한 시·군간 물량 선점경쟁에 의한 자체세원 증대 폭이 변동됨에 따라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해 관내 군부대 영외매점에 담배판매진열장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자체세원인 담배소비세 증대를 도모하였다.

○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별	징수금액	증 감	비 고
1999	6,950	-	
2000	6,900	△50	
2001	9,831	2,931	
2002	11,631	1,800	
2003	11,961	330	

둘째,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세업무 본청이관으로 지방세 부과인력감소 및 담당자 교체에 따른 지방세원 누수가능성 배제를 위해 세수증대 제고를 위한 세원 재점검(feed-back)제도의 운영으로 2000년 대비 2001년도는 41%이상 지방세율이 증대되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 탈루세원 유형분석을 통한 월별 중점 과세자료 확보 및 추징
 - 월별 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
 - 추징자료 확보 과세전 적부심사 안내문과 함께 과세안내문 발송후 부과
- 각 세목별 일상업무 범위내 부과업무와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분의 경우 과세자료 정비시 같이 운영
- 부과체척기간 미경과분인 3년전('99년)부터 과세자료를 일괄 확보후 적정납부 여부 조사 등이다.

<세원 재점검제도 운영후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세 목 별	연도별 징수액				
	2003	2002	2001	2000	1999
총 계	90,886	87,243	77,333	54,879	53,891
도 세	54,332	53,539	42,836	28,952	30,550
시 군 세	34,739	31,958	29,503	24,813	21,861
과 년 도	1,815	1,746	1,993	1,114	1,480

셋째,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압류(해제)사건이 폭증함은 물론 압류(해제)비용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압류(해제) 비용을 징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양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압류권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은 필지(건)당 9,500원, 차량·중기는 대당 4,000원의 체납처분비를 고지하여 원인자 부담에 원칙에 의거 징수함으로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재원확충에도 기여하였다.

<체납처분비 징수실적>

(단위 : 천원)

년 도 별	징 수 실 적			비 고
	합 계	부동산	차량·등기	
2001	16,569	8,265	8,304	
2002	19,991	5,727	14,264	
2003	24,872	6,288	18,584	

◎ 예산절감 부문

먼저, 양주시 설계심사제도의 운영이다.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추진시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설계도서 시공시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은 물론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초래함에 따라 설계 사전심사를 통하여 설계단계부터 공사시공 관리에 완벽을 기함은 물론 연간 약2억6천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설계 사전심사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개최횟수(회)	설 계 공사비	설계 심사 공사비	절 감 액
2001	9	5,875	5,617	258
2002	12	6,971	6,710	261
2003	20	7,210	6,953	257

둘째 가로등 관리방법의 시직영 수리팀 운영이다.

양주시 관내 5천여 등이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시 1998년 이전에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고장신고 접수시 수리토록 하였으나 고장신고 접수 후 보수조치가 늦어져 지역주민들의 고장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9년이후부터 팀장 1명, 전기직 1명, 운전원 1명을 구성하여 보안등 수리 및 가로등의 안정기, 램프등에 대한 보수를 전담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가로등 시직영 수리팀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단위 : 천원)

년 도 별	총등수	지 출 내 역(천원)			비 고
		수리등수	지출액	등당단가	
1998	4,585	1,230	109,613	116	업체지정수리
1999	4,968	1,900	72,265	89	군직영팀 운영
2000	5,424	2,120	71,838	38	
2001	5,985	2,875	77,265	34	
2002	5,985	3,120	81,838	32	

3. 앞으로의 방향(재정확충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 양주시의 지방재정 운영측면 중 세출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도권 인근지역으로써 역사 및 문화자원과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매력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확충분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인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몇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인 경기불안으로 지속적인 투자위축이 되고 있지만,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도권 1일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흥 및 백석관광지와 감악산을 중심으로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산악자전거도로, 자연학습장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영세한 1,500여 개의 중소기업체들의 경쟁력 및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으로 양주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남면 검촌지방산업단지내 유치에 성공한 섬유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관

내 830여개 섬유관련 제조업의 섬유염색기술 향상과 기술지원으로 열악한 섬유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셋째, 양주시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물, 천연기념물, 유·무형문화재 및 각종 민속자료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다양한 향토문화를 활용 누구나 쉴 수 있는 정적인 문화공간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동적인 문화공간을 연계 개발하고, 특히, 양주의 자랑거리인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문화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한 양주별산대놀이나 양주소놀이 굿 등 지역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각종 민속놀이의 상시공연으로 향토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유발을 통해 사장되어 가는 각종 문화유산을 육성·발전시켜 지역발전의 촉매로서의 여러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의 진흥효과를 제고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結 論

지방자치이후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여러방면의 노력에 비해 지방재정 확충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확충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행정경영은 물론 지역경영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절박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는 경기북부권지역에서도 잠재력과 성장능력은 무한하나 특성있는 지역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인을 통한 지방재정관련 용역을 의뢰중이다.

앞으로, 양주시는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전원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좋은 양주』라는 시정방침아래 전공직자는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새로운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地方債 早期償還으로 健全財政 運營 事例

전라남도 여수시

목 차

- I. 基本現況
 - 1. 沿 革
 - 2. 一般現況
 - 3. 地域의 特性
 - 4. 豫算의 規模
- II. 地方債 制度
 - 1. 地方債 概要
 - 2. 地方債 發行 基準
 - 3. 地方債 發行節次
 - 4. 地方債의 借入 및 償還
- III. 麗水市 地方債 管理
 - 1. 地方債 現況
 - 2. 地方債 管理 垂範事例

I. 基本現況

1. 沿 革

- 고려시대 : 여수현, 돌산현
- 조선시대 : 여수군, 돌산군(1896년)
- 대한민국 : 여수시, 여천군(1949년), 여천시(1986년), 통합여수시
(1998. 4. 1 주민발의)

2. 一般現況

- 인 구 : 310,350명(남 156,686, 여 153,664) 100,917세대
- 면 적 : 498.68km²(전남의 4.2% 전국의 0.5%)
 - ※ 도서 317개(유인도 49, 무인도 268) 해안선 905.87km
- 행정구역 : 1읍 6면 20동 192리 417통
- 행정조직 : 11국·소 43과 8사업소 27읍면동
 - ※ 시의회 사무국 : 1국 3전문위원
- 공 무 원 : 1,731명(본청 688, 사업소 650, 읍면동 393)

3. 地域의 特性

- 주민발의에 의하여 3개 시·군 통합 도시 -
- 우리나라 남해안 중심관문을 담당하는 국제 해운도시
- 호국 문화유적과 해양 국립공원을 가진 관광 휴양도시
- 청정해역과 광범위한 수산시설을 갖춘 해양수산도시
- 국가경제의 토대인 여수, 울촌산단이 입지한 임해 공업도시

4. 豫算의 規模

- 예산규모 : 5,818억원('03년대비 33% 감)
 - ※ 재정자립도 : 33.5%
 - 일반회계 4,554억원, 특별회계 1,264억원
 - ※ 전국 시군지방자치단체중 12위
- 기금 및 채무
 - 기금현황 : 중소기업 진흥기금 등 9개기금 164억원
 - 채무현황 : 434억원, 부채비율 7.45%

II. 地方債 制度

1. 地方債 概要

가. 지방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 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

- 1)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2) 발행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한 필요사업의 경비 조달
- 3) 채무이행기간 -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짐

나. 지방채의 종류

- 1) 사업성격에 의한 분류 : 일반회계채, 기타특별회계채, 공기업채
- 2) 발행방법에 의한 분류 : 차입금, 지방채증권
- 3) 자금종류에 의한 분류 :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국외채
- 4) 기타분류

다. 지방채의 기능

1) 재정조달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보완(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
- 국가전체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정책유도기능

- 정부시책사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융자 또는 알선

- 정부시책에 대한 지방채의 일괄 심사로 총액 규제 가능

3) 자원조정기능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재정 정책적 장치
- 승인제도를 통한 중복투자의 방지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조정관리 감독 기능

4) 자원 보전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
- 재해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수되어 필수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적으로 인정

2. 地方債 發行 基準

가.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단체

- 1)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 2) 채무 상환비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 3)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기준 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 4)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나.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

- 1)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 2) 당해사업의 공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
-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地方債 發行節次

가. 지방채 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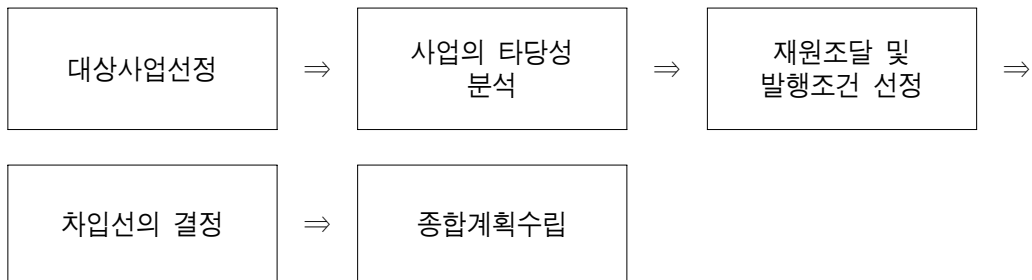
- 발행 전년도에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며
-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도중 추가 발행 가능

나.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의 필요성

-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 지방채무관리의 안정성 확보
- 투자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

2) 계획수립의 단계



3) 지방채 발행승인

- 익년도 정기계획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종합한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 협의후 10월 31일까지 승인
- 추가 발행계획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가 연도중 신청한 지방채 발행

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4) 의회의결 및 예산편성

-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확정하여 정기승인분은 당초예산에 추가 승인분은 최초 추경예산에 반영

4. 地方債의 借入 및 償還

가. 지방채의 예산편성

- 편성대상 : 지방채 발행 승인액 및 상환원리금
- 반영시기 :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한 승인분은 당초예산에 추가분은 승인후 최초의 추경예산에, 상환원리금은 당초예산에 반영

나. 자금의 차입

- 차입절차 :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적의 조달
- 차입시기 : 사업진도, 자금수요등 감안 적의 조달

다. 원리금 상환

1) 상환형태

- 만기상환 : 지방채 발행시 약정한 기일내 원리금 상환
- 조기상환 : 약정일 도래전에 원리금을 상환

<조기상환절차>

· 채권보유파악 ⇒ 보유자 동의징구 ⇒ 원리금 지급 및
채권(증서) 회수 소각

2) 상환방법

- 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차관 및 원리금 균등 상환방법이 대부분
- 은행차입등 : 원리금 일괄상환 방법을 원칙으로하나 균등상환 하는 경우가 있음

3) 상환재원

- 일반회계채 : 지방세, 교부세등의 일반재원으로 상환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채 : 사업수입, 실수요자부담금, 특정재원을 상환재원으로 하나 필요시 일반재원으로 보전

Ⅲ. 麗水市 地方債 管理

1. 地方債 現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예 산 액	계		493,010	680,449	871,901	581,775	
	일반회계		402,951	527,458	602,595	455,354	
	기타특별회계		95,857	127,029	245,882	102,700	
	공기업특별회계		24,202	25,962	23,424	23,721	
채 무 현 황	계	계	62,124	41,531	44,413	43,363	
		원금	51,272	32,247	35,907	35,142	
		이자	10,852	8,274	8,506	8,221	
	일반 회계	계	40,755	23,901	18,074	17,417	
		원금	34,131	18,886	14,745	14,262	
		이자	6,624	5,015	3,329	3,155	
	기타 특별회계	계	5,411	3,012	14,060	14,060	
		원금	4,915	2,588	11,033	11,033	
		이자	496	124	3,027	3,027	
	공기업 특별회계	계	15,958	14,618	12,279	11,886	
		원금	12,226	11,473	10,129	9,847	
		이자	3,732	3,135	2,150	2,039	
1 인 당 채 무 액	인구수		323,913	320,146	310,350	307,764	
	1인당채무액		190	128	143	140	
	일반회계		125	74	58	56	
	기타특별회계		16	9	45	45	
	공기업특별회계		49	45	39	38	
채 무 비 율	계		12.60	6.10	5.09	7.45	
	일반회계		10.11	4.44	2.99	3.82	
	기타특별회계		8.21	2.37	4.48	13.69	
	공기업특별회계		65.93	56.30	52.42	50.11	

2. 地方債 管理 垂範事例

- 원리금 조기상환으로 이자 53억원 예산 절감 사례 -

가. 지방채 관리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 강구

- 1) 1998년 4월 1일 3여통합으로 기존에 관리해오던 900억원 이상의 지방채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 162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검토 및 조기상환 계획 수립
- 2) 2000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3개년 동안 긴축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분산 투자 억제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과감한 배제 및 부서별 예산 10%이상 절감하기 운동 전개
- 3) 자체경상비 절감액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산투자 억제로 절감한 순세 계잉여금 200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활용
- 4) 189억원의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므로써 2000년 12월 현재 채무비율이 12.1%에서 2002년 5월말 현재 5.3%로 낮아져, 행정자치부에서 채무상환 비율 20%이상인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지방채감채 기금조례」 설치기준에 밑돌아 채무관리의 안정적 운영 기여
- 5) 고금리(년 7.5~8%)지방채 189억원의 상환기간을 3~5년 앞당겨 조기상환 하므로써 이에 발생하는 이자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운영

<주요상환내역>

- ▶ 여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 44억원
 - 상환기간 : 1996~2003
 -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8% 3년거치/5년균등상환
 - 지방채 발행액 55억원중(이자 17억 6천만) 11억을 계획상환하고 남은 잔액 44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이자 5억 7천만원 절감 효과
- ▶ 국도17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100억원
 - 상환기간 : 2000~2007
 -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7.5% 3년거치/5년균등상환
 - 지방채발행액 100억원중 '01년 1월에 80억원을 상환하고 '01. 2월에 잔액 20억원을 전액조기상환하여 이자 35억 8천만원 절감효과
- ▶ 신월~웅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0억원
 - 상환기간 : 2000~2007
 -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7.5% 3년거치/5년균등상환
 - 지방채발행액 40억원중 '01. 12월에 15억원을 상환하고 '02. 5월에 잔액 25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이자 11억 2천 5백만원 절감 효과
- ▶ 화양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5억5천6백만원
 - 상환기간 : 1994~2006
 - 차 입 선 : 환경오염 방지기금 7%3년거치/10년균등상환
 - 지방채발행액 5억5천6백만원중 3억 6천만원을 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남은 잔액 1억 9천 5백만원을 조기상환하여 이자 2천 5백만원 절감 효과

6) 2002. 10. 31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으로 320억원과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25억원등 455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도 해당사업의 진도와 자금 운용시기를 판단하여 2004년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나. 지방채 운영 홍보책자 제작

1) 민선3기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의 정보화 및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에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시의 채무는 매우 건전합니다”홍보 책자 제작

- 2) 읍면동 시정보고회, 민방위 대원교육,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명회시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선진 지방재정운영의 기틀 마련

다. 참여 예산제도에 의한 주민 참여 행정 기반 구축

- 1)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 및 지방채 등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상시 공개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정보를 공유토록 행정서비스 제공
-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지방재정사항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살림살이와 주요투자사업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 마련

라. 2003년도 지방채 운영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1)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3. 11. 13~11. 29까지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2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방채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2) 기관표창(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상금 1억원 수상
- 3) 유공공무원 표창 : 대통령 1명, 행정자치부장관 1명